

광주 인공지능 중심도시·전남 해상풍력단지 지원 요청

청와대 2차 한국판 뉴딜전략회의의 무슨 내용 논의됐나

이용섭 시장, 착공식 대통령 참석 건의

친환경 공기산업 예타 통과 지원 요청

김영록 지사, '전남 뉴딜' 블루이코노미

해상풍력 통한 상생일자리 사업 소개

이용섭 광주시장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인공지능(AI) 집적단지 착공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신안 해상에 원전 8기 규모의 8.2GW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의 전남형 일자리 사업을 설명하고, 오는 11월 개최 예정인 선포식에 참석해 줄 것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광주 친환경 공기업 산업 예타 통과 요청=이 시장은 이날 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대통령의 광주 방문과 친환경 공기 산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날 인공지능 중심 디지털 뉴딜, 2045년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 실현을 위한 그린 뉴딜, 광주형 일자리를 토대로 하는 휴먼 뉴딜 등 광주형 3대 뉴딜 정책을 소개했다. 이 시장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슈퍼 컴퓨팅 시스템이 들어설 집적단지 착공식에 대통령이 시인과 함께해 인공지능 전산화, 사업화, 산업화의 물꼬를 트기를 바란다는 지역민의 마음을 전했다. 실제 17개 시도 중 한국판 뉴딜 사업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방문하지 않은 지역은 광주시와 제주도 등 2곳 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내 착공 예정인 AI 데이터센터는 국내 최대이자 세계 17위 수준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누리온 5호기(25.7 페타플롭스)의 3배 수준인 88.5페

타플롭스의 연산량을 갖추게 된다.

이 시장은 그린 뉴딜사업의 하나로 광주에 위치한 친환경 공기 산업은 엄청난 시장 수요를 가진 미래 전략산업인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전남형 상생일자리 적극 지원 건의=김 지사는 '신안 8.2GW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통해 그린 뉴딜 전남형 상생일자리 사업을 소개하면서 사업 성공을 위한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정부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듯, 전남도는 청정 자원을 바탕으로 청정 전남 블루이코노미 추진에 매진하고 있다"며 "오는 2030년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을 도약으로 하는 정부 목표를 위해 전국 1위의 해상풍력 잠재력을 토대로 서울과 인천시민이 1년간 사용가능한 8.2GW 해상풍력단지 조성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가 언급한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48조 원을 투입해 신안 해상에 대단위 풍력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단일단지로는 세계최대 규모다. 발전단지 조성, 풍력발전기 부품 제조 등 일련의 과정에서 450개 기업을 육성하고 12만개의 전남형 상생일 자리를 창출하게 된다고 김 지사는 설명했다.

김 지사는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관련해 전남도는 지난 9월 전남도·신안군·신안수협·새어민회(최대 어민단체) 4자간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주민 수용성도 확보했다"며 세계적 프로젝트인만큼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상에서 생산된 전기를 육지로 끌어오는 데 쓰이는 '송배전 공동접속설비 구축'의 경우 공공성이 강한만큼 정부 지원을 대폭 늘리고, 여러 정부 부처인-허가를 총괄 지원할 수 있는 '해상풍력개발지원본부' 설립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게 골자다.

전남도 관계자는 "문 대통령께서는 김 지사가 건



13일 오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국정감사 현장 시찰에 나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광주비엔날레 5·18 40주년 특별전 광주 전시작품을 둘러보고 있다.

의한 해상풍력개발지원본부 설립에 공감을 표시했다"며 "김 지사는 문 대통령에게 오는 11월 개최 예정인 전남형 상생일자리 선포식에 참석해달라는 건의도 드렸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문화전당, 아시아 넘어서는 문화플랫폼 역할 필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현장 국정감사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하 문화전당) 현장 국정감사가 진행된 13일 국회의원들은 문화전당이 아시아를 넘어서는 문화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문화전당이 아시아와의 교류 활성화로 '아시아-한국-지역'을 잇는 문화플랫폼을 담당하는 것 외에도 콘텐츠 연구와 창작을 토대로 '실용적 문화발전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아시아문화전당 문화장조출에서는 이날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시찰이 진행됐다. 먼저 질의를 한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문화전당이 비록 광주에 있지만 아시아의 문화 허브와 소통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국가시설"이라며 "개관 5년이 됐지만 여전히 많은 사업들이 광주라는 지역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콘텐츠 운영 실적을 보면 아직 지역적인 사업에 머물러 있다"며 "창제작 사업들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문화전당의 핵심 역할은 아시아 문화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창작하는 것"이라며 "당초 비전과 엇박자가 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창제작 부분은 세계적인 선수를 문화전당으로 집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앞서 가장 한국적인 것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직을 통합하는 법 개정 이전에 구성원 이견부터 조율해달라는 주문도 나왔다.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문화전당 조직 통합조정안을 담은 '아름답'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에 오르자 문자 폭탄이 쏟아졌다"며 "다른 무엇보다 구성원 내부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문자 내용을 소개하자면 '법률을 막아주세요', '당사자 없는 법 개정 철회해주세요' 등이다"며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이에 이기표 아시아문화원장은 "조직 통합 과정에서 고충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노조가 초창기에 문자폭탄 방식으로 목소리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주일 전 노조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시민협의체가 만들어졌는데 이들의 목소리를 전부 포함하면 법안이 발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태영 문화전당장 직무대리는 "한정된 재원과 인력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부는 물론 외부기관과도 협력해 전당의 설립 목적에 부합한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광주·전남 행정통합, 주민참여 숙의형 공론화 통해 결정해야"

광주시의회서 정책토론회

"공론화 위원회 조례 제정 필요"

"주민 공감대·특별법 제정 우선"

최근 이용섭 광주시장의 제안으로 지역 내 이슈로 떠오른 광주·전남 행정 통합 문제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선 호남대 교수는 13일 광주시의회에서 '광주·전남 통합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신고리 원전 건설, 대입제도 개편,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공론화로 해결할 사례를 들며 통합 문제를 결정할 공론화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정책 결정 과정에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론화 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공론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 등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진상 동산대 교수는 "통합에 따른 지역 소외와 불이익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 숙의형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뚜렷한 지역발전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주민 간 공감대 형성, 지역 내 불균형과 불이익 해소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합 논의가 실효성 있게 추진되려면 제주특별자치도나 세종특별시와 같이 특례 조항을 통해 자치 및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상필 광주전남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관이 주도하기보다는 민간 중심의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해

투명한 정보공개와 지속적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 관련 제도적 기반 확보가 우선 필요하다"며 "광역지자체 통합 관련 특별법 제정,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 체계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선용 전남 나주시의회 의원은 "통합 선연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해묵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의지와 정치적인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익주 광주시의원은 "광주전남 통합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결국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내 삶이 하나 듯...
수목장은 보성 늘푸른입니다.

고객상담센터 062-412-2800

자연이 준 삶 자연으로 돌려주세요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세상이 변하듯 ... 장묘문화는 수목장이 대세입니다.

자연장의 장점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보성군 소재

(순천, 화순, 나주, 여수, 광양, 고흥군, 장흥군)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10기 이상 선산도 가능합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